“생명·생태를 시대적 가치로 삼아 광복 100년을 준비해 나가자”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0. 시작을 위한 질문과 주장

- **질문**
  - ‘광복’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광복 100년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 ‘비상사태’, ‘대량멸종’ 등 생명·생태 위기의 위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고들이 쏟아져나오는데 현실의 변화는 왜 더디고 미진한가? 예견된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이 부실한 가운데, 시민의 참여와 권한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미래’에 대한 시간 감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 **주장**
  -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도 익숙한 채 의지·의존하고 있는 가치와 생활양식, 제도, 시스템 자체에 생명·생태 위기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접근 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내야 해결의 실마리도 비로소 보일 것이다.
  - ‘광복 100년’을 20년 후의 다가올 미래로 놓고 예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미래 시간 감각을 갖고 지금 현재의 인식과 삶의 태도, 의사결정 기준, 사회구성 원리를 바꿔내는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 생명·생태 가치는 이를 위한 진단과 모색의 의미 있는 준거가 된다.

1. ‘광복’(光復)의 시대적 의미를 확인하며

“2045년 ‘광복 100주년’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념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생명 존재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지속가능한 ‘삶’과 ‘문명’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선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 해방 당시 ‘광복’은 식민 지배로부터 ‘주권 회복’의 의미가 컸다.(光復≈解放≈獨立)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국주의의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도 독립운동 선조들이 꿈꿨던 ‘광복’은 국가 독립만이 아니라[1], 인간 존엄과 공존, 평화의 보편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나라 만들기’였다.

- ‘3·1운동 선언서’에서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가 평등하게 함께 누리는 삶, 공존의 사회 원리를 강조
  - ‘전인류 공존 동생권(共存 同生權)’, ‘동양평화(東洋平和)’, ‘세계평화(世界平和)’, ‘인류행복(人類幸福)’ 등
-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밝힘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2]
- ‘헌법 전문’에 공존, 평화, 지속가능성 실현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밝힘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3]

-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 이러한 광복의 본래 정신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달성했지만,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 높은 자살률, 극단적 경쟁과 불신·갈등·혐오, 정신적 고립과 집단적 우울감이 심화되고 있음
- 여기에다 ‘제6차 대멸종’, ‘기후위기 비상사태’ 등 생태적 위기의 확대는 생명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줌
-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면, 향후 20년 내(2045년) 생명 경시 현상과 생태학적 재난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인간으로서 자유와 존엄은 물론 생명계 전체의 생존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 광복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광복’의 의미는 정치적 국가 독립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공존의 원리를 민족과 인류에서 뭇 생명과 생태계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생명·생태 가치가 존중되는 삶과 사회, 문명 실현에 있다.

- 지난 시절 ‘광복’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의 의미라면, 이제는 ‘무엇을 향한’ 즉 어떤 삶, 사회, 문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가치 지향적 의미를 적극 담아내는 것이어야 함
- 생명·평화의 DNA를 내장하고 있는 한민족 정신문명의 빛나는 가치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서, K-culture가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시대에 걸맞게, 생명·생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존·공생·상생의 원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아가 사회와 나라, 문명의 원리로 연결, 확장시켜낼 필요가 있음

---

1) 구(舊) 체제의 복원은 더욱 아니다.
2) 김구 저, 김학민.이병갑 주해, 2016, 『(정본) 백범일지』(학민사), 430-431쪽.
3) 해당 내용은 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 돌아보기 - 지난 80년 사이(1945~2026) 어떤 일이 있었나?

- 일제의 식민 지배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 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고소득, 고학력, 고기술을 갖춘 선진국가로 발전했다. 또한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시민사회의 활력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4] 와 불평등(소득·자산·세대·성별·지역 등)의 심화와 복합적 갈등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불안정 노동, 주거 불안(부동산 격차 확대) 등도 심각한 문제다.

-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약 1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음
  -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인구 10만명 당 2017년 24.3명에서 2020년 25.7명, 2024년 29.1명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음
  -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처음으로 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당장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보다 나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이 개발연대 시절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힘이 되었는데, 경제성장과 민주화 국면을 거치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믿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해체되고 있다.

- 60~70년대 :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에 대한 집단적 염원을 바탕으로 개발국가 체제가 작동
  - '국가 총량적 성장 = 국민 행복 보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노동, 인권, 환경 등) 희생과 헌신을 정당화함 ("조국 근대화",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
- 80~90년대 :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개방화, 올림픽 개최, 선진국가 진입('96 OECD 회원국)과 함께, 자유 경쟁과 경쟁력이 시대적 가치로 자리(경쟁국가, 추격국가 모델이 작동)
  - 개방화, 효율화, 생산성에 기반한 세계 속 경쟁력 강조 ("세계 일류", "신한국", "삶의 질", "선진사회" 등)
-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공동체적 관계(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가 무너지고, '지금 고생해도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 확대

4) 사회경제적, 공간적 양극화에 더해 심리적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토대인 다양성이 질식되고 공화(共和)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공존·공생·상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 구조조정과 평생직장 개념 붕괴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적 믿음이 무너지고, 생존 불안감 확대("고통분담", "경쟁력 강화", "자기개발")
- 2010년대부터 시작해, 2014,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적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함
  - 미래 보장 수단의 이동(공부, 노동소득, 저축 → 부모 자산, 부동산, 주식), 계층 상승 경로 차단(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현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정규직(대기업vs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
  -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 패데믹 충격, 플랫폼 노동 확대, 부동산 가격 급등, 자산 격차가 확대로 "부모세대의 삶의 표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5] 미래를 상상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짐. ("헬조선", "이생망", "수저계급론", "N포세대", "영끌"(부동산, 주식, 코인) 담론의 확산, 일부 청년 체대의 극단화, 극우화 현상 등장)

3. 내다보기 - 향후 20년(2045, 광복 100주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 과학기술 영역의 엄청난 혁신 속도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희망적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 신기술(인공지능·로봇·양자·나노기술·바이오기술·지구공학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위험 노동 대체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노동력 대체(실업), 불평등 심화, 인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약화('뇌 썩음' 현상), 기술 오용(군사기술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6]를 통해 '위태로운 현재'와 '암울한 미래'를 진단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절벽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다고 진단
  -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전쟁으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고, 오랫동안 안정을 뒷받침해 온 규칙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구적 공동 과제(기후, 테러, 팬데믹 등)가 부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문제 해결 역량은 갈수록 취약해짐 (신뢰·협력 기반 다자간 체제 → 경쟁·대립의 다극 체제)
- 10년 후(2036년) 세계는 '절벽 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 응답자의 2/3가 10년 후 미래가 '불안정', '격동', '폭풍'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미래를 '폭풍' 상태로 전망하는 비중이 장기로 가면서 2배 이상 증가(8% → 19%)

5)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22년 8월 11일자 자료를 보면 한국인 약 60%가 "다음 세대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학계, 기업,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분야의 세계 전문가 1,300여 명으로부터 변화하는 글로벌 리스크 환경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 정리했다. (World Economic Forum, 2026, *The Global Risks Report 2026*, 21st Editon.)

<단기(2년)와 장기(10년) 지구적 전망>[7]

구분	폭풍(stormy)	격동(turbulent)	불안정(Unsettled)	안정(stable)	평온(calm)
단기(2년)	8%	42%	40%	9%	1%
장기(10년)	19%	39%	32%	10%	1%

※참고: '폭풍'(전 지구적 재앙의 위험이 임박함), '격동'(대격변 및 전 지구적 재앙 발생 위험 증가), '불안정'(일부 불안정, 전 지구적 재앙 발생 위험 증가), '안정'(국지적 혼란, 전 지구적 재앙 발생 위험 낮음), '평온'(전 지구적 재앙의 위험이 미미함)

- 10년 후 예상되는 10대 리스크 중 절반을 '환경' 관련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20년 후(2045년)에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후(2036년) 글로벌 리스크 순위 전망>[8]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내용	극한 기상 이변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허위 및 잘못된 정보	인공 지능 기술의 부정적 결과	자연 자원 부족	불평등	사이버 보완 취약성	사회적 양극화	오염
범주	환경			기술		환경	사회	기술	사회	환경

- 특히 '기후위기 비상사태'는 핵심 변수로, 현재 상태로는 20년 후에 지금보다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생태학적 재난이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미래세대의 자유와 존엄, 생존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전망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5년 배출격차 보고서>는 향후 10년 내에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상승해, 극한 기상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봄

▸ 2025년 1월 세계기상기구(WMO)는 보고서를 통해 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5도 상승해 기후 재앙을 막고자 설정한 한계선 1.5도를 처음 넘어섰다고 밝힘.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해 기후 위기의 임계점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임

• 기후·생태 위기로 인한 재난과 분쟁, 기후·생태 난민의 급증[9]은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됨. 특히 기후 재난의 영향은 식량 생산 시스템의 파괴로 이어져, 인구 부양을 위한 생태 시스템이 붕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7)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7쪽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8)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9쪽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9) IEP(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서 발간한 ETR 보고서(Ecological Threat Register 2020)는 2050년까지 10억 명 이상이 낮은 회복력 상태로 생태적 사건의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Groundswell 보고서는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의 기후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후 문제와 함께 '제6차 대멸종 시대'(sixth mass extinction)로의 진입도 확실시된다.

• 멸종의 원인이 자연적 요인에서 인위적 요인으로 빠르게 이동해 오고, 야생동물 멸종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지는 등 생태학적 아포칼립스(apocalypse)가 현실화 되고 있음

▸ 멸종은 유전자의 소멸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 관계망, 시간성이 붕괴하는 대사건인데, 이런 생명 세계의 '조용한 붕괴'(silent unraveling)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자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한국 사회는 '인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겪을 전망이다.

• 통계청 자료[10]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총인구 감소, 출생아 수 장기 감소, 생산연령인구 급감, 고령인구 비중 급등 추세를 통해 인구구조 및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이것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총인구는 2024년 약 5,175만 명 수준까지 오른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 5,006만 명, 2050년 4,71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2100년에는 2,439만 9천 명 예상

▸ 인구성장률(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이 될 것이며, 이후 감소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40년 34.3%, 2050년 40.1%로 크게 높아질 전망

▸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구성비는 2025년 69.5%에서 2040년 58%, 2050년 51.9%로 계속 줄어들 전망

▸ 이에 따라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대상 연령층 비중)는 2025년 43.9%에서 2040년 72.4%, 2050년 92.7%로 크게 높아질 전망임

• 한편,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는 정치적 성향의 이동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장 많은 미래 시간을 가졌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세대의 실망과 분노가 정치적 보수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20년 후 이들이 사회의 중심(40~50대)을 차지하게 될 것임. 반면에 현재 기준으로 진보·개혁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0~50대가 60~70대가 되면서 고령층의 탈보수화 경향이 커질 수도 있음. 하지만 유동층·무당층·중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지형(제3지대)이 출현하면 지금과 같은 세대간 정치 성향 이동도 확연히 달라질 것임.

4. 살펴보기(1) - '미래 인식 상실'과 '내부 분열' 상태에서 맞게 된 생명·생태 위기

- 지금 우리는 '미래 인식의 상실', 즉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 '미래는 끝났다'(the future is over)는 인식의 확산은 우리는 물론 세계적 현상이기도 함

10) 통계청, 2023,「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보도자료.

▸ 성장·발전·진보·혁명을 지향하며 안정되고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열린 미래' → 정체·불안·쇠퇴·파국의 상황에서 일상화된 위험을 견디고 살아가는 '닫힌 미래'

• 미래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 무너진 상태에서 각자도생 속에서 살아남고자 자신이 가진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음

▸ 미래 전망과 상상력이 사라진 자리에 피로와 우울, 불안감이 자리하고, 일상화된 위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기보다 즉각적인 소비와 위안을 찾게 됨

-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되는 외파(外破)보다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내파(內破)가 공동체와 민주주의, 생명의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 식민 지배와 군사통치 시절 '외부'의 실체적 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회 시스템 '내부'로부터 생명력을 소진시키는 비인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세가 주체의 자율적 사고를 통제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자본과 플랫폼의 영향력 아래 반지성주의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면서, 정신적 식민화·황폐화, 심리적 내전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음

▸ 복합 갈등(세대·지역·이념·계층·성별 등) 속에서 동료 시민들과의 신뢰와 연대의 자리를 불신과 혐오가 차지하고 있음

▸ 가짜뉴스, 확증 편향, 혐오와 선동, 탈진실, 극단주의가 세력화하는 가운데, 현실 정치와 시민사회 영역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약화되고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음

-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생명·생태 위기[11] 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나 빠른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사람들은 불평등과 갈등, 경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음

▸ 각자도생과 사생결단식 대결 구조 속에서 잠깐 한 눈 팔아도 낙오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존재론적 불안감이 특히 청년 세대를 단절과 고립, 피로, 우울감, 절망감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

▸ 문제는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국력이 약하거나 성장이 부족한 데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음

•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의 생태 위기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삶과 욕망의 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증폭되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 전체의 안녕과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성인 우울증상 유병률이 2017년 2.7%에서 2025년 3.4%, 2035년에는 약 4.3%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여기에 기후·생태 위기로 인류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이런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무력감, 상실감, 불안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을 유발·확산시키고 있음

11) '생명 위기'가 생명 존재의 '인위적 죽임(죽임)'의 문제와 생명성의 고갈로 '살아 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면, '생태 위기'는 생명(들)의 존재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 거주 적합성을 상실한 채 불안정해지면서 죽음과 죽임 현상을 가중, 가속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인간 중심(인간 예외주의) 문명에서 생명·생태 가치를 기본으로 한 문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 생명·생태 위기의 핵심에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 존재들을 구별·서열화하고,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존재들의 고통·죽음·죽임에 대한 무감각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음

▸ 대량멸종 사태에 침묵하고, 중동 지역의 대량 살육 전쟁 상황에도 우리의 관심을 유가와 주식, 부동산 관련 지표 변동에 더 쏠리도록 만드는 지금의 현실이 대표적

• 결국 생명·생태 가치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열쇳말로 삼아,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기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을 필요

▸ 오늘날 생명·생태 문제는 단순히 보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산·소비·생활양식, 사회 운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새롭게 하여 공존·공생·상생의 문명의 길을 열어가는 가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5. 살펴보기(2) - 생명·생태 위기에 내재된 근대적 시간성의 균열과 충돌

- 지금은 생태적 맥락과 조건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근대적 '시계 시간'(clock time)을 바탕으로 관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 시간에 대한 인식과 운용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옴

▸ 산업혁명 이전 : 농업 시간, 계절 시간, 종교 시간, 지역 공동체 시간 등 다양한 시간들이 함께 존재

▸ 근대 사회 : 다양한 시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인간 삶을 하나의 균일한 시간 체계 속에 편입시킴 (달력, 표준시, 철도·공장 시간, 국가 시간 등)

▸ 현재 : 서로 다른 복수의 시간들이 공존하며 충돌하는 시대 (지질학적 시간, 생물학적 시간, 역사적 시간, 기술적 시간, 정치적 시간, 기후 시간, 디지털 시간 등)

- 특히, 지금 우리는 즉각적 성과, 빠른 반응, 단기 효율을 우선하는 '단기적 시간성'이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

▸ 선거 중심 정치(4-5년 주기, 승자독식 구조) 체계는 차기 선거의 승리를 위해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지지율)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음.(포퓰리즘 정치, SNS 정치, 실시간 여론조사와 여론 추수 정치 등)

▸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 정책처럼 부담은 현재 세대가 지는데 혜택은 미래에 나타나는 의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못함

【경제】

▸ 주주자본주의의 사활을 건 경쟁 구조와 자본의 빠른 수익률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분기별

실적, 주주 가치 극대화, 금융시장 초단기화, 부동산 시장 단기 투기화 등)은 지속 불가능성을 확대 심화시킴

- ‣ 플랫폼 경제, AI 기반 경제는 이런 경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언론】

- ‣ 초·분·시간 단위로 생산·유통·소비되는 정보, 실시간 트윗, 카드뉴스, 숏폼과 클릭 전쟁 등 미디어의 시간성 단축 경향과 알고리즘 기반 확증 편향은 단기적(근시안적) 사고를 강화시킴
- ‣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가운데 혐오 및 선동 콘텐츠 확대와 공론장의 파편화는 숙의에 기반한 깊은 성찰과 장기적 사유 기능을 약화시킴

【교육·종교】

- ‣ 즉각적 성과 창출과 경쟁력 강화, 상품화 논리가 교육·종교 영역에 침투하면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통한 교육의 인격 형성 역할과 영원성·초월성에 기반한 종교의 영적 성숙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

- 기후·생태 문제는 근대적 시간 체계가 위기를 맞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 인간이 진화 과정을 통해 익숙해 온 '시간'에 대한 인식과 질서가 기후·생태 위기로 인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수준(하루, 계절, 생애)과 수백에서 수천만 년 단위의 심층적 시간(deep time) 지평(생태적, 지질학적, 행성적 시간 등)과의 불일치
  - ‣ 기후·생태 문제에는 원인 행위(온실가스 배출 등)와 그 결과(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의 시급성을 대중이 즉각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려움.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로 인식해 다루도록 하는 '지연의 정치'(politics of delay)가 작동함
  - ‣ 단기주의에 기반한 시간 감각과 실천 방식은 인류세, 기후위기, 대멸종 시대를 인식, 체감하고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기후·생태 문제는 과거·현재·미래 시간이 얽혀 있는 가운데, 한편으론 너무 느리게, 다른 한편으로 갑자기 폭발함으로써, 기존 시간 체계로는 이해도 해결도 어려움
  - ‣ 기후·생태 위기는 무기력, 우울, 체념,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미래 감각(future feeling) 자체를 상실시킴

6. 광복 100년, 생명·생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환의 방향과 과제들

"1945년 광복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사건"이었다면, 2045년 광복 100년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여정"이 되어야 한다."

- 변화는 필연적이다. 다만 그 방향과 내용, 결과는 현시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만큼 더 이상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에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총회에서의 발언을 통해,[12] 기후 위기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힘 있는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냉혹한 진실은 우리가 1.5도 이하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제 203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1.5도 한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1.5도 목표를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단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습니다. ...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신속하게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협상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기입니다."

(1) 심리적 낙관이나 비관을 내려놓고, 현실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13]는 말을 전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久), 막힌 것을 뚫고, 끊긴 것을 연결해 순환시켜야 하며(通), 그러려면 기존 질서에 대한 총체적 변화(가치·제도·관계·방법 등)를 만들어내야 하며(變), 그 출발은 막다른 상황에 처한 현실(窮)에 대한 깊은 자각이 중요
  - ‣ 절체절명(絶體絶命), 총체적인 난국(亂局), 내우외환(內憂外患) 등 현실의 위기감에 대한 실체적 진단과 분석이 필요. 이것을 기존의 관성, 기득권과의 절연과 포기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의 토대로 삼을 필요
- 정치·경제·사회·생태적으로 막다른 상황에 처한 현실(窮)에 대한 깊고 철저한 자각이 대전환의 출발점
  - ‣ 생명·생태 위기 문제가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깊은 영향을 주는 당면 과제로 인식
  - ‣ '탄소중립 2050' 역시 25년 후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바꿔내야 할 전환적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책임의 시공간적 외주화 경계)

(2) 다원화된 사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민주적 방식으로 총체적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정치·사회·제도적 리더십 확보를 통해 열망과 역량, 지혜를 모으고 연결해 내는 '구심력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 생명·생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임계 상황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것을 견제·견인하고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갈 사회적 리더십은 부재한 것이 현실의 근본 문제
  - ‣ 복합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기반인 신뢰와 공감 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생존경쟁에 몰입하면서 사회적 구심력이 빠르게 약화된 결과

12) 이 회의는 25년 11월 브라질의 도시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본회의에 앞서 열렸다.

13) 『주역周易』의 해설 문헌인 「계사전하(繫辭傳下)」에 나오는 구절이다.

- 선진국 따라잡기 방식의 추격국가 모델의 한계는 분명한데, 이것을 대체할 합의된 국가발전 모델은 없어서 방향 감각이 상실된 상황 (강한국가 모델로는 한계)[14]

- 불연속성과 단절, 시행착오 반복에서 벗어나 축적과 연계를 통해 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
  -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원의 전략적 조성과 배분, 전환 문턱을 낮추고 부담과 저항 줄이기, 전환의 씨앗을 보호·육성·확산하고 유기적 연결시키기 등의 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해 낼 리더십의 제도화 필요
  - 생명·생태에 대한 공동의 가치 지향과 약속을 담은 헌장(憲章) 제정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반영하는 개헌 등

- 정책의 호흡이 짧고 정책적 일관성과 연속성, 연계성과 통합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단기주의의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주의를 장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정부 위원회' 역할 조정 및 강화(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45 미래전략위원회 등),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대신할 가칭 '미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해 '미래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두는 방안 등)[15]

(3) 시민 인식의 질적 전환과 전환에 대한 폭넓은 지지기반을 마련해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충격과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호 신뢰로 인내하는 사회적 기반과 토대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
  - 완충지대, 회복탄력성, 사회·생태적 공유지 확장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 지지, 참여가 있어야 실현가능함
  - 우리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53~61%의 범위로 정해 발표했는데,[16] 이것을 달성하려면 향후 10년간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그만큼 기존의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 자체를 바꿔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이 더 커지는 만큼,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을 극복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탄소중립 실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표인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긴 안목과 인내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든든해야 함

- 기존의 개발·성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경로의존성'과 물질 중독, 성장 중독, 탄소 중독 등 각종 '중독' 현상이 만들어낸 '기후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생태 인식과 시간 감각을 갖춘 기후시민, 생태시민, 지구시민, 행성적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14)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4대 제조강국',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방산 4대 강국' 등 강한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15) 장기주의 장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정규호의 글을 참조 바람.(정규호, 2026, "기후·생태헌법을 위한 '공공성'과 '장기주의' 실현 방안", 「환경법과 정책」, 34(1): 101-127.)

16) 이 목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요구, 국제사회 권고안을 놓고 단일 목표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탄소중립 2050 목표 실현을 위해 전향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할 필요
  -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동안 위험 감소 및 대비를 위한 가장 잠재력이 큰 접근 방식으로 "대중 인식 제고 및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17] '기후·생태 리터러시'(climate and ecology literacy) 시민교육이 중요
  - 대의제의 단기주의와 참여 제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와 공론에 기반한 '시민의회' 모델도 주목할 필요. 다만 의사결정의 질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시민 인식 전환의 다양한 계기가 만들어질 필요
  - 생명·생태 관련 공통의 과제를 놓고 전 국민이 함께 숙의하면서 집단적 학습과 성찰의 시간을 경험하는 '공론주간 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민 인식 전환에 있어 시민사회와 언론, 종교의 전환적 역할도 중요함
  - 충격적 사건(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한 생명 인식을 사회적 각성으로 연결시켜내고, 독서·명상·수행 등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내면 전환'의 시간을 경험하고, 미래세대,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타자에 대한 연민·배려·책임의 마음 길러내기 등

(4) '시간' 인식과 활용 능력은 전환의 중요한 실마리다. '미래 인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희망의 서사를 만들고 구체화시켜 나가자.

- 미래를 희망보다 불안과 절망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위기감, 공포감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전환 자체도 어렵다는 것임
  - 위기 인식이 커질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시야는 좁아지고 판단은 성급해지는데, 여기에 극단주의가 결합하면 창조적 대안은 질식되고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됨
  - 생명·생태 위기와 관련해 '비상사태', '대멸종' 같은 종말론적 공포감을 자극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권위적이고 단기적인 기술적 처방에 의존하게 만듦

- 미래는 현재 이후 다가오는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래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통찰력, 공동의 비전과 공통 감각을 바탕으로 '희망의 서사'를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
  - 미래를 향한 비전을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실험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18]가 대표적 사례로, 마을과 지역 단위의 공동체운동, 사회연대경제 활동,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 등이 해당됨

- 자국이익 중심주의의 영향력으로 국가 간 협력체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희망의 서사 만들기와 실천은 국경을 넘어 확장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 관계 역시 대결주의 청산과 평화적 공존 체계 마련은 물론, '서로 살림'을 필요로 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에 대한 적극적 구상과 대안 마련이 중요 (이 과정에서 생명, 생태 의제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이 될 수 있음)

17)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39쪽.

18) 예시적 정치는 칼 보그스(Carl Boggs)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1960년대에 등장했다가 1990년대 들어서 국가주의를 넘어선 사회운동 차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Fians, Guilherme., 2022, "Prefigurative Politics". in Stein, F.(ed), *The Ope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pp. 4-5.)

- ▸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생태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비전과 역할 체계 마련 (백범 김구 선생이 소망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실현)

(5) 죽임의 정치를 극복하고 생명·생태 가치를 실현해 내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을 만들고 실현하자.

- 진보/보수, 좌/우로 나뉘어 서로 적대시하면서 세력 대결을 하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치와 팬덤 정치의 상당한 영향력은 단기주의와 지속불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 특히 산업사회와 냉진 시대의 산물인 기존의 진보/보수 담론과 정치 모델은 기후 문제를 비롯한 생명·생태 위기에 무감각, 무능력,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제는 진보/보수, 좌/우의 낡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을 찾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 현실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는 주장의 방향이 달라 보여도 '보다 나은 미래'라는 공통된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음. "변화하면 더 나아진다"와 "지킬 것을 지켜야 더 나아진다"는 입장 모두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
  - ▸ 하지만 오늘날 기후·생태 위기, 저성장, 전쟁, 기술 불안, 인구 감소, 죽임 현상의 확대 등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진보/보수의 개념 틀과 정당화 기반, 정치 지형도 달라져야 할 때임
  - ▸ 새로운 시간관을 바탕으로 체질을 바꾸고 차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이 필요함
- 생명·생태 가치 실현을 위한 전환의 새로운 정치는 기존의 진보/보수 구도 사이의 어느 중간이나 중립의 위치 잡기가 아니라 벡터 자체를 달리하는 정치로, 혐오·적대·대결 중심 정치에서 공존·상생·돌봄 중심 정치로 바꿔내는 새로운 언어와 모델, 방식이 필요
  - ▸ 편가르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혐오의 정치'와 맹목적 추종과 추앙[19]에 기반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생명·생태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공생·상생의 길을 넓혀가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할 때
  - ▸ 인내하고 견뎌내는 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내는 일, 적극적인 양보(내려놓기와 내어놓기)를 바탕으로 느슨한 돌봄과 살림의 그물망을 만들어 재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토대(비빌 언덕과 안식처) 만들기 등
- 생명·생태 위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극한 대립과 갈등, 독선과 위선, 맹목적 추종, 기득권과 독점 등의 장벽에 가로막혀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광복100년 국민동행이 강조하는 '포용', '공존', '절제', '대화'는 새로운 정치·사회운동과 리더십을 위한 중심적 가치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음

19) 맹목적 믿음과 단정적 태도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기확신'(self-confidence)과 '우리편 편향'(myside-bias)은 지적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